

# ‘역사전쟁’에 가려있던 새정치 내분 재점화

## 문재인 대표 조은 교수 평가위원장 임명 강행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6일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를 지휘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에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임명을 강행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벌이는 ‘역사전쟁’에 가려있던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장 비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의 기습 의결은 수면아래 잠복해 있던 당내 계파 갈등의 봉인을 해제한 것이라며 국정화 지지 투쟁 국면에서 당의 단합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교수의 평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둘러싸고 지도부간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 논란이 공개회의의 전향 예정 시각인 오전 9시를 넘기자 문 대표가 “더 미룰 수 없다”며 의사봉을 두드려 임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조 교수 인선은) 둘러막기 인사”라며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둘러막기 인사를 해도 비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국을 방문중이었던 주승용 최고위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의 동의를 구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를 적은 없고 내가 추천했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평가위원직을 고사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던 적은 있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조은 교수 임명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지도부의 동의를 얻지

## 비주류 “기습 의결” 반발

## 안철수 “둘러막기 인사”

## 평가위 구성 등 진통 예상

못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주류측에서) 이미 평가위원 구성을 마쳤다는 말도 나오는 만큼 평가위원 선정과 다면평가 등 시행세칙에 대해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평가위가 혁신위 안과 세칙을 검토해 수정·보완을 하고, 최

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장 인선은 마무리됐지만 평가위 구성 및 활동 관련 시행세칙이 아직 의결되지 않은 만큼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총을 소집키로 했다.

비주류 진영 일각에서는 완전 국민경선제 가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 평가위원회 자체가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의총 결과에 따라 주류와 비주류의 정면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여야 협상을 통해)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평가위는 효력이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주류 진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시도는 평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요구하는 서명에는 79명의 당내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최규성 의원 측에서는 “지도부 흔들기가 아닌 야권 통합을 위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상설전시장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0주년 사진전’에 참가한 새정전 전병헌 창당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과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단 한번 평가로 현역 26명 숙아낸다고

## ‘염라대왕’ 조은 위원장 ‘20% 물갈이’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를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물갈이’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 128명 의원 가운데 ‘하위 20%’인 26명은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공천이 원천 배제되게 된다.

다만, ‘선거일 5개월 전’인 내달 진행되는 평가 결과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순위가 매겨지지 않은 채 연말께 구성될 공천 관리위원회에 이관된다.

여론조사 전문가를 포함, 9~15인 범위 내에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임기 2년의 선출직평가위는 애초 관련 당규가 통과된 지 1개월 이내인 지난날 20일까지 구

성됐어야 했지만, 20여일 이상 지연됐다. 평가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문 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당헌당규 상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해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는 1차례의 평가만 실시된다.

평가는 ▲지도도 평가(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활동 평가(10%)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화돼 실시되며, 이를 토대로 교체지수가 산출된다. 다만, 비례대표의 경우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적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 새정치 60주년 DJ센터서 기념 사진전

## 광주시당 당원 연수 총선 승리 결의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0주년 기념 전국 순회 사진전이 17일 광주에서 개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상설전시장에서 ‘창당 60년 기념사진전’을 열었다.

이날 사진전엔 새정전 전병헌 창당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 등 내외빈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들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당의 역사 속 인물과 파란만장한 민주화 투쟁 현장 등 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작품들이다.

이번 사진전은 19일까지 이어진다. 새정전은 이번 광주 사진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 광역 시·도를 순회하며 사진전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시당은 과학기술협력 교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구갑·북구을·광산갑·광산을 당원 연수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주최한 연수에는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당 주요 정책 발표, 광주 선관위 김기용 광역조사팀장의 공직선거법의 이해 교육 등이 이어졌다. 광주시당은 이날에 이어 오는 23일 동구·서구갑·서구을·남구 지역위원회 핵심 당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영·호남 상생발전 의회가 앞장서자

## 광주·전남·대구·경북의회 의장 간담회

조영표 광주시의회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의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 등 4개 광역의회 의장이 영·호남 상생발전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양 지역의 주요 공동현안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의장단은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폐회 후



조영표 의장 명현관 의장

따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긴급간담회는 영·호남을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11월말 역사적 확장·개통을 계기로 영·호남 4개 자치단체가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동서회합을 굳건히 하고 양 지역 공동 주요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앞장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에 따라 마련됐다.

4개 시·도의회의장들은 ‘수도권 패권주의’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해서 영·호남 4개 의회가 공동대응에 나가기 하는데 뜻을 모으고 더 나아가 현재 ‘동서회합 상생협약’을 맺고 있는 전남·경북과 ‘달빛 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까지 2+2를 아우르는 4개 광역의회 협력방안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교육자치 보장 교육감 직선제 유지해야”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밥쌀용 쌀 수입 중단도 촉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제7차 임시회를 열고 현행과 같은 교육감 직선제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비용을 발생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날 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어 “교육 자치의 보장과 교육에 대한 주민의 주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현행과 같은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특히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 중단 촉구 건의문’ 등 총 9건의 안건을 협의·채택하고 청와대·국회·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이날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관련법 조지 개정 지원’과 ‘문화올림픽 성공적 실현을 위한 특별 지원’ 건의문을 채택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관련법이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에 묶여 있어 올림픽특구 내 민간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문화올림픽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 100억원의 전액 삭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농어촌 선거구 주민 힘으로 지킴시다

## 새정치 전남도당 범도민 가두서명운동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확정과 관련,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범도민 가두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전남도당 산하 10개 지역위원회별로 ‘우리의 선거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킴시다’는 제목으로 역과 터미널 등에서 가두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번 서명운동엔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도당 및 각 지역위원회 당직자 등이 참

석했다. 전남도당은 서명운동을 통해 농어민의 주권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구 기준 선거구 확정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당 김현호 수석 사무처장은 “10%도 되지 않는 농어촌 선거구를 줄여 대도시 지역의 의석 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300만 농어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농어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